

시론

지역경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역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드디어 2026년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의 특례를 부여받았으나 실질적인 주(State) 수준의 자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광주시'라는 행정조직은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되면서 행정단위의 해체로 사라진다. 과거의 분리는 미래 발전의 초석이라고 했지만, 이번 통합은 행정통합만이 생존전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는 1986년 40만8천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통합 후에도 30여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전국 평균 0.615이며 광주는 0.732지만 5개 구 중에서 광산구만 '정상'일 뿐이고 전남은 0.329로 22개 시·군 중 20곳이 '위험' 지역이다. 또한 1천대 기업 비중(2023년 기준) 역시 호남권은 3.1%에 불과해 수도권 73.6%(736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경제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로 인해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고유

가와 고환율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가운데, 지역 내수와 건설 경기 역시 얼어붙어 지역경제 침체로 고음이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2025년 자동차 수출액 75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전년 대비 91% 증가, 특·광역시 수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이 도약의 중심에 대한민국 제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있다. 과거 대기업 조립라인의 해외 이전과 노조 갈등으로 지방의 기업 유지가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GGM은 시민, 지방정부, 노사, 기업이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2019년 9월 출범했다. 이런 점에서 GGM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사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대주주로, 현대차, 광주는 행 등이 주주로, 근로자와 시민, 협력업체들이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연합체' 성격을 띤다.

성과도 눈부시다. GGM은 2021년(1만2천353대) 대비 생산량이 5배 가량 늘었으며 유가 급등으로 효율적인 전기차 위주로 2026년 6만1천200대 생산을 예상한다. 수출 비중은 2025년(5만3천200대) '캐스퍼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73%(4만2천601대)에 달하고 일자리도 2021년 564명에서 2026년 752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평균 연봉도 5천만원 시대를 앞두

고 있다. 지금 GGM은 지역경제 위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GGM은 생산 과정에서 대립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의 모델 '광주형 일자리'로 지역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신뢰라는 무형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GGM은 2026년까지 752명을 채용하면서 그동안 공채에서 보여준 34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과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90%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GM은 초기 내연기관차 생산에서 벗어나 전기차 양산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다만 최근 파업으로 '누적 생산목표 35만대' 달성까지의 사회적 약속이 흔들리며, 3년 4개월 간 지켜온 '상생의 가치' 퇴색되면서 생산 동력이 약화되고 2교대 전환과 전기차 제2공장 설립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노사 신뢰의 균열을 걱정하면서 이번 파업을 넘겨 지방정부와 함께 근로자들의 정주환경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거대하고 있다.

이제 GGM은 현대차 위탁 조립 라인을 넘어 2,2교대와 제2공장 설립으로 20만대 생산과 2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포용적 성장의 엔진이 돼야 한다. 앞으로 GGM은 전기차 양산 체제를 공고히 해 글로벌 친환경차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지역 협력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장칼럼

한 알의 씨앗이 운명을 좌우한다



김 재 천 전남도 종자관리소장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밥 한 공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밥상 위에 오르는 한 톨의 쌀, 한 알의 콩, 한 움큼의 채소는 모두 한 알의 건강한 씨앗에서 출발한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알이 우리의 생존을 떠받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다.

우리 조상들은 종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도 종자만큼은 끝내 남겨 두었다. 씨앗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다음 해를 약속하는 생명이고, 가정 경제를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며,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이어주는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산업화와 세계화를 거친 오늘날에도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 곡물 가격 급등락, 기후위기, 식량수급 불안이 일상이 된 지금, 종자는 더욱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된 오늘날, 씨앗은 더 이

상 농업의 재료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와 직결된 안보자산으로 불린다. 선진국들이 자국 품종 개발과 종자 지식재산권 확보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MF 금융위기 당시, 우리의 토종 종자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외국 종자에 의존하던 시절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종자를 지켜야 한다.

전남도 종자관리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식량작물 종자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기관이다. 30만평의 땅에서 생산된 벼·보리·밀·콩 등 식량종자는 합평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납품되고 다시 계약재배 농가의 증식과정을 거쳐 '보급종'이라는 이름으로도 내 농업인들에게 공급된다.

한 알의 씨앗이 농업인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공정과 책임의 사슬이 이어져 있다. 종자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종자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벼 종자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범씨 1만개 중 단 2개만 다른 유전형질이 섞여도 종자가 될 수 없다. 병해충이 있어도 작물이 쓰러져도 불합격이다.

발아시험에서 10개 중에 2개 이상이 싹을 틔우지 못해도 종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한 해 농사의 출발점이자, 농업인의 신뢰와 직결된 생명선이다.

씨앗에 문제가 생기면 한 해 농사의 실패

로 이어지고 이는 곧 농가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연결된다. 그 파장은 전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종자관리소의 현장은 늘 긴장 속에 있다. 파종 단계부터 재배지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 이형주 제거, 수확과 건조, 정밀한 선별과 저장에 이르기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의 확인과 점검을 반복한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시간이 차곡 차곡 쌓여야 비로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종자가 탄생한다.

종자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알의 씨앗이 가진 무게를 매일같이 실감하며 일하고 있다.

우리가 생산한 씨앗 하나하나가 기관의 신뢰를 결정하고, 전남도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알의 씨앗이 한 기관의 운명을, 한 지역의 미래를, 나아가 한 나라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알의 씨앗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국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소의 존재 이유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생명의 여정을 시작하듯, 우리의 노력이 전남 농업의 튼튼한 뿌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도 그 한 알의 씨앗에 우리의 운명을 담아내고 있다.

독자투고

작은 불씨 하나가 평생의 터전 앓아간다



매년 건조한 봄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다.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 행위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첫째, 부주의한 소각은 대형 산불의 주범이다. 봄철의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순식간에 수만평의 산림으로 번지게 하며, 이는 소중한 자연 자산을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둘째, 논·밭두렁 태우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해충을 방제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과 달리, 오히려 해충의 천적인 거미나 지표면의 유익한 곤충까지 사멸시켜 농사 환경을 악화시키고, 토양 생태계를 파괴해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셋째, 쓰레기 소각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원이다. 비닐·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노천에서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는 대기 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쓰레기는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농업 부산물은 파쇄해 퇴비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관리 방식이 철저히 정착돼야 한다.

무엇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먼저'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자연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소각 멈추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다. <송의근·담양소방서 교서119안전센터>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혼탁 양상 보이는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부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예비경선 발표 직후 득표율을 담은 출처 불명의 허위 문건이 대량 유포된 것이다. 민형배 후보는 경선결과 비공개 방침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테러로 규정했고, 신정훈 후보 측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알뜰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교란 행위다. 중대 범죄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본선이나 다음없는 예선이다. 특히 대한민국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법을 앞둔 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다. 공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큰 편인데,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유감이다.

이제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후보(기호순)를 대상으로 4월3-5일 사흘간 본경선이 진행된다.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조직력 싸움에 더해 대중 인지도가 중요한 것대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해 검증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아 평가가 표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구도다. 다자 대결 특성상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상위 2명을 놓고 4월12-14일 결선투표가 유력하다. 네거티브 공방도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후보 간 지역 공약과 시·도정 평가 등을 둘러싸고 비판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여기에 예비경선 이후 '지라시'가 조직적으로 살포돼 우려를 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있고 있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판이 더 커진 만큼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평가받아 '준비된 리더'를 다투는 무대가 돼야 함에도 진흙탕으로 비화하고 있다. 아무리 여당의 텃밭으로 야권의 존재가 미미하다고 한들, 갈등만 부각되면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의 취지가 훼손되고 지역주의만 심화될 것만 염려가 적지 않다. 갈수록 지지세가 결집될 테지만 건강한 정책 대결의 장을 만들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재차 촉구하는 바다.

어업·여객선 면세유도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해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초유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정부가 이번 주석유류 최고 가격을 재설정한다. 국제 유가 상황을 감안해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상한선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당국은 첫 시행 직후부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폭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유류비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1달 전 가격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3월 현재는 1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MOPS)와 대미 환율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200ℓ 한 드럼에 17만6천원, 1당 880원이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변동폭으로 관심이 커질 수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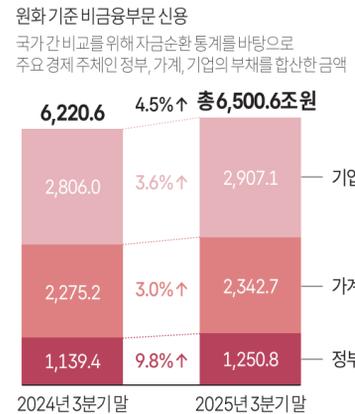
에 없다. 현재의 2배를 넘어 각각 30만원대 중반, 1천300원대까지 급등할 것만 수협의 추산치에서 보듯 암담한 지경이다.

어업인 입장에서 발등의 불이다. 더구나 최고 가격제에도 난방용 등유가 계속 올라 시설 하우스를 중심으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갈수록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농어민과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기 직전으로 치닫은 모습이다. 게다가 민생 보호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의 요구대로 4월분 면세유 안정이 시급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조치돼야 한다.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보조금에도 어선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누락해 고유가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살펴야 하겠다. 중동 국가에서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해야 하는 때다. 흑시라도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국민 모두의 위기가.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픽 뉴스

국가총부채 규모 현황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채 신용은 6천500조5천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0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천조원, 4분기 5천500조원, 2023년 4분기 6천조원을 차례로 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80%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말(283%)보다는 0.3%p 낮아졌지만,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246.5%)보다는 1.5%p 높아졌다. /한경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